

복합위기 시대의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 병 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

대전환포럼

2023년 3월 24일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 중국 코로나 재확산과 급격한 경제위축
성장률 급감 (8.7%→ 2.7%)
-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과 미-중 간 글로벌 정치경제적 갈등 고조;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
- 팬데믹 위기, 인플레이와 고금리의 금융 불안정, 정치경제적 긴장 고조의 삼중 위기
- 고물가-고금리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
-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1.7%
(선진국 0.5%; GEP 2023) (OECD 전망 2.2%)
- 1990년대 이후 코로나팬데믹과 금융위기 다음으로 낮은 성장전망

TABLE 1.1 Real GDP¹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year unless indicated other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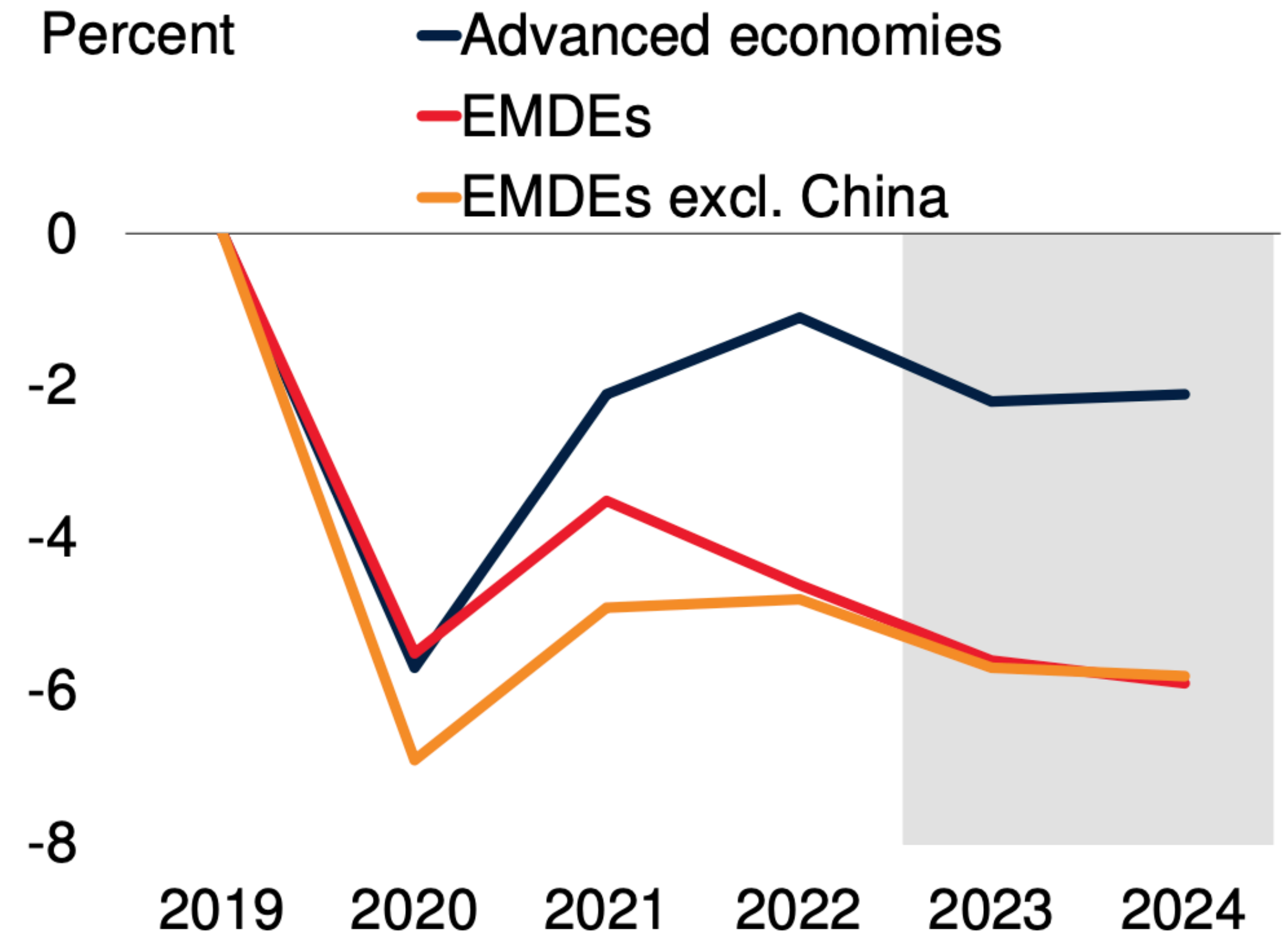
	2020	2021	2022e	2023f	2024f
World	-3.2	5.9	2.9	1.7	2.7
Advanced economies	-4.3	5.3	2.5	0.5	1.6
United States	-2.8	5.9	1.9	0.5	1.6
Euro area	-6.1	5.3	3.3	0.0	1.6
China	2.2	8.1	2.7	4.3	5.0
World trade volume⁵	-8.2	10.6	4.0	1.6	3.4
Commodity prices⁶					
Energy price index	52.7	95.4	151.7	130.5	118.3
Oil price (US\$ per barrel)	42.3	70.4	100.0	88.0	80.0
Non-energy commodity price index	84.4	112.0	123.7	113.7	113.0

자료: World Bank 2023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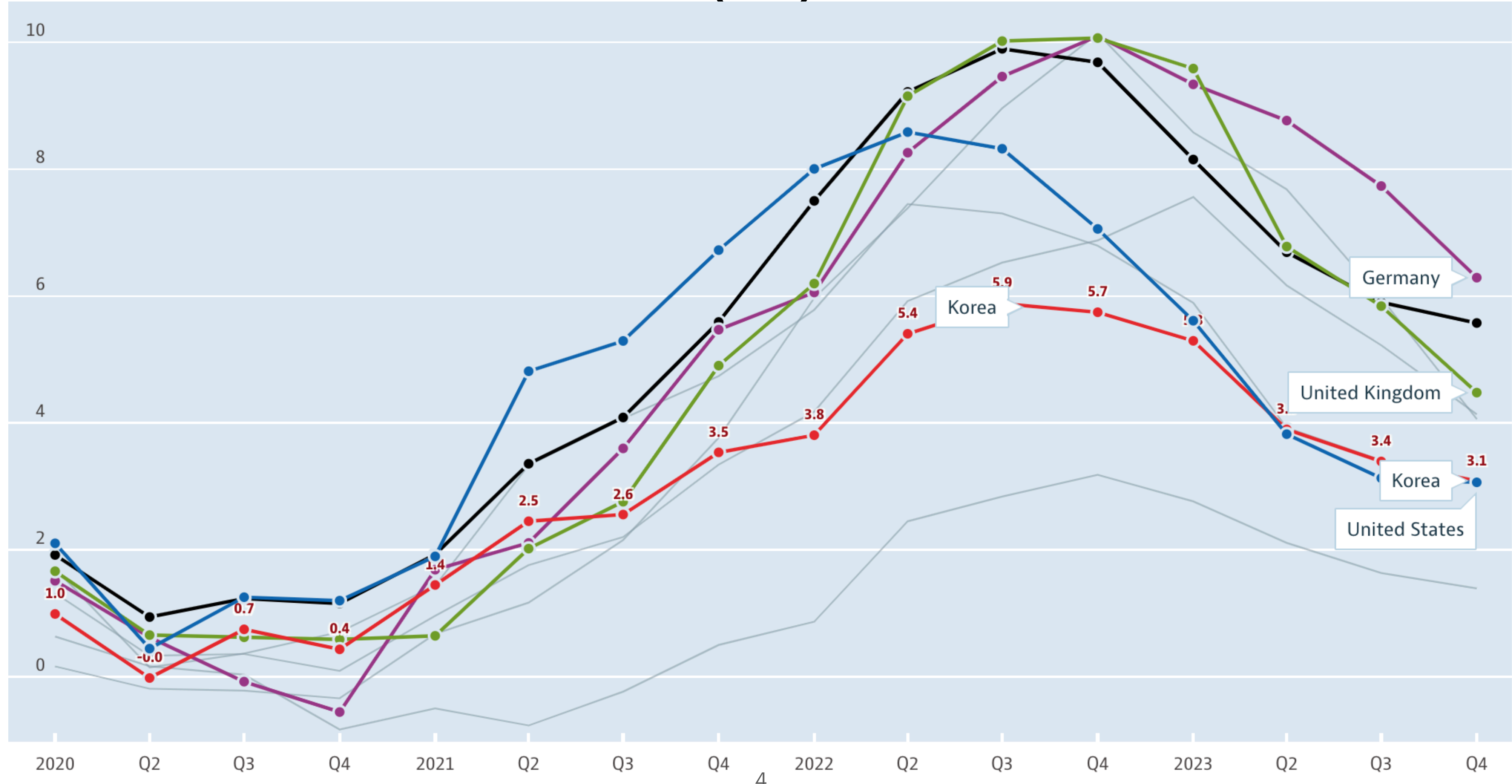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E. Deviation of output from pre-pandemic trends

- 글로벌 무역(trade volume) 성장률 전망 1.6% (2022년 4.0%; WEP 2023) (OECD real trade 성장률 전망 2.9%, 2022년 5.4%)
- 글로벌 성장률 보다 무역성장률의 하락 폭은 더 심각; 중국과 개발도상국 진영의 성장률 하락 폭이 큰 영향
- 팬데믹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의 트렌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 미-중 무역/패권 경쟁이 글로벌 무역질서의 양분화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저성장 추세가 고착될 수 있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자유무역질서의 퇴조
- 한국경제전망: 2023년 성장률 2% 이하 (대외 수요 감소) (OECD 1월 전망), 정부 전망은 1.6% (KIF, 1.7%) -> OECD 3월 하향 조정
물가전망: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지속; 2024년 말 이후 2% 이하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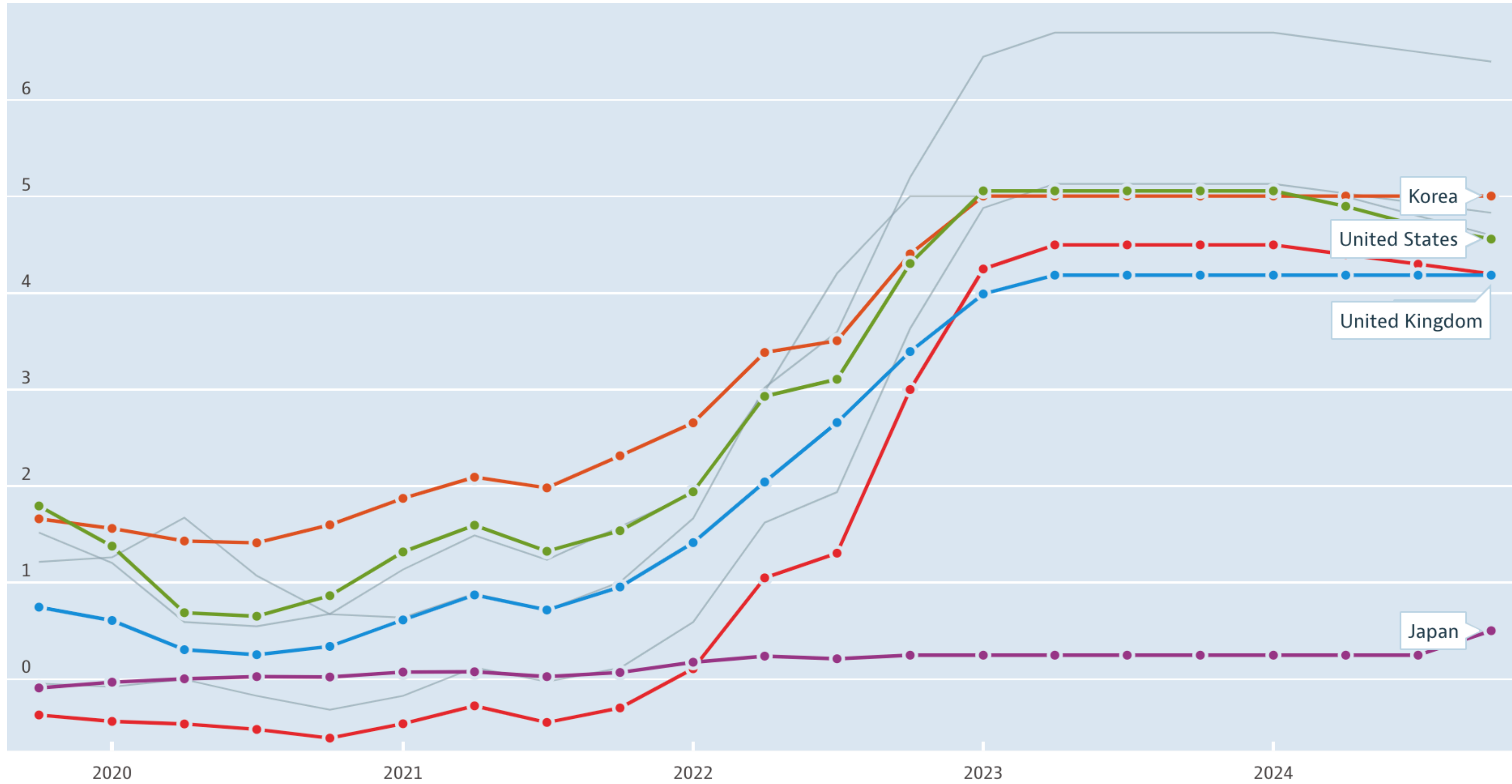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Inflation (CPI) 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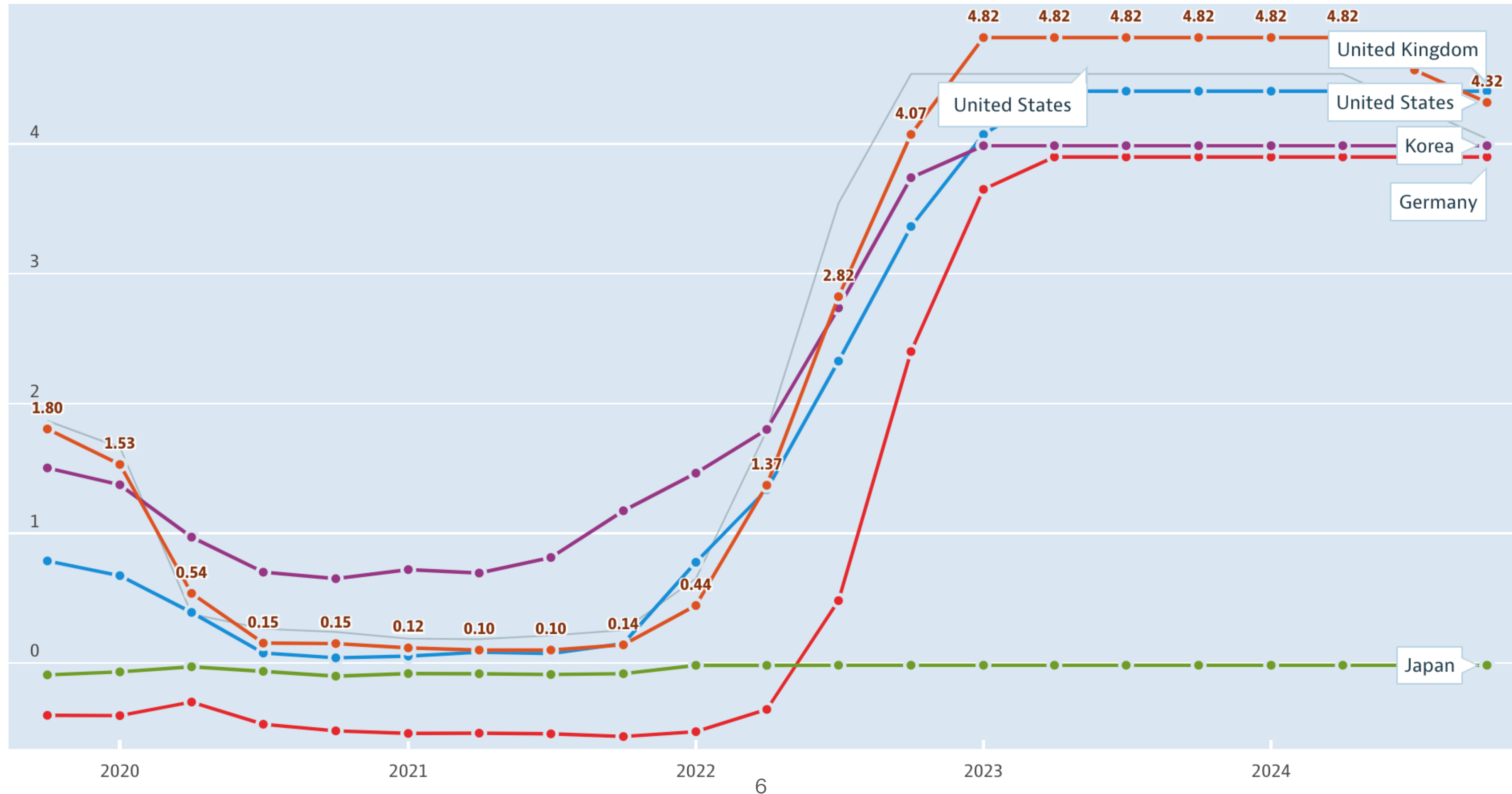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장기 이자율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단기 이자율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주요국 재정수지 전망

2023

TREND (1990-2027)

% of GDP

5
0
-5
-10
-1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Germany	-2.49
Major advanced economies (G7)	-4.63
France	-5.58
Japan	-3.62
United Kingdom	-2.25
United States	-5.71
Korea, Republic of	0.08

자료: IMF, net lending/borrowing (overall balanc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GXCNL_Go1_GDP_PT@FM/DEU/MAE/FRA/JPN/GBR/USA/KOR?year=2023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공급제약과 생산비용부담 증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킴.
-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과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한 선호와 환율 급등 등으로 재정이나 경상수지가 취약한 나라의 경제위기 불안 고조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과 국채가격 폭락 사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풀려나간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 하락, 가계신용위축, 한계기업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 최근, 미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전망
- 글로벌 경제와 무역 전망: 2023년 침체, 2024년 소폭 회복
주요국의 통화긴축/고금리 정책도 2023년 상반기를 지나 당분간 지속전망
-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코로나 팬데믹 상황/미국과 선진국 물가상승 억제 여부/미-중 갈등(무역, 외교, 군사, 안보 등)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미국

-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인상; 부자증세 통한 재정확충과 위기대응을 위한 지출확대 병행
-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의 국내 공급망 구축
- 대중국 기술압박, 주요 첨단제품의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협력질서와 공급망 재편(e.g., CHIPS 4);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해소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투자,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국 내 투자유치 및 대중국 기술압박(중국, 러시아 등과의 투자 및 부품/최종재 거래 제한 조치), 대기업과 고소득가구를 겨냥한 부자증세로 7400억 달러 규모 재원 확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국민 건강보험 처방약 인하 등 4,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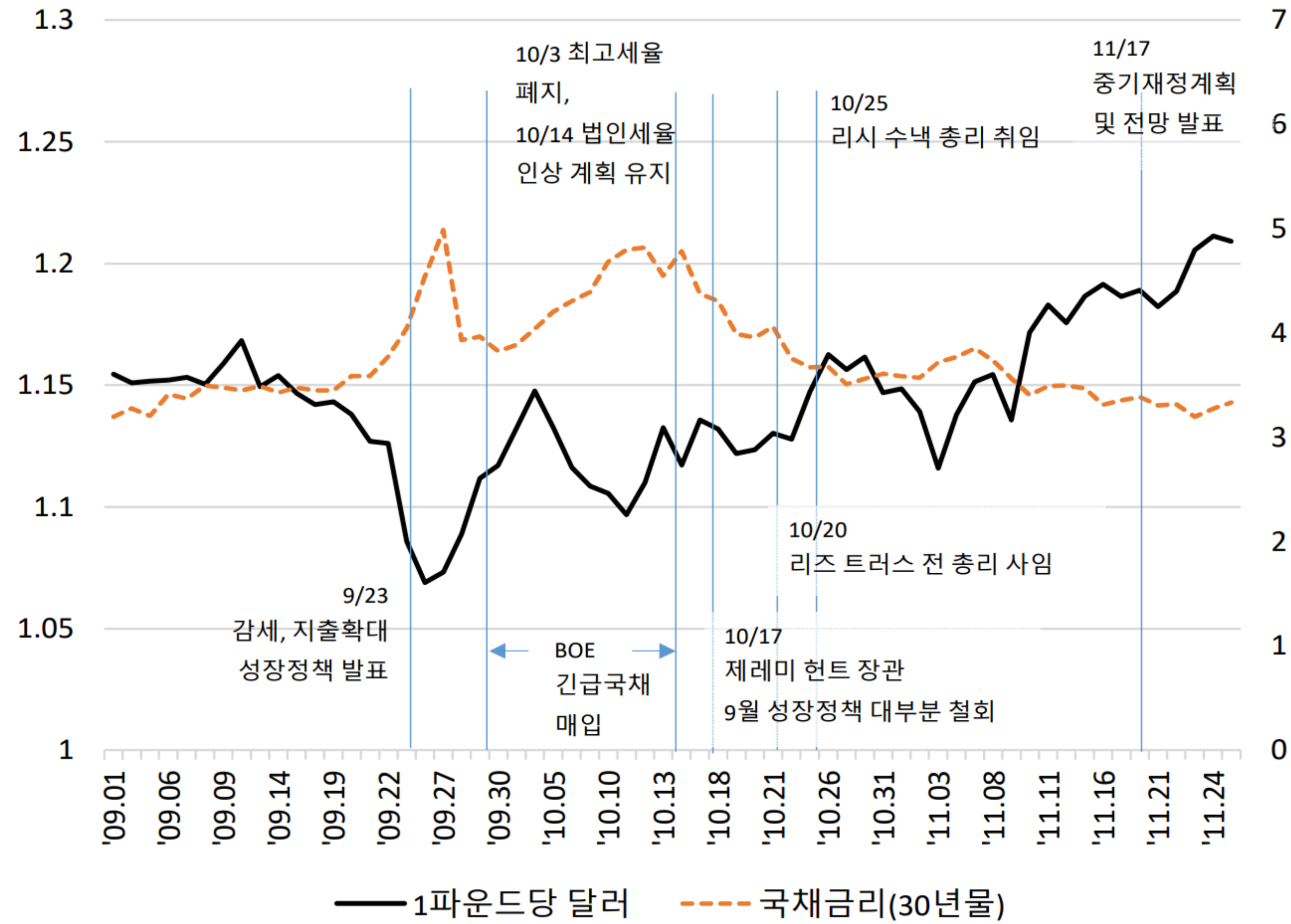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영국

- 영국 트러스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촉발한 위기:
최고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 대규모 부자감세안 발표 ->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 확산, 영국 국채 가격 급락, 금리 상승, 영국 파운드화 가치 폭락 ->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확산
-> 44일만에 총리 사임과 정책 철회
- 신임 리시 수낙 총리의 중기재정정책: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법인세 인상,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세 확대 등 부자증세로 정부수입 확대안 (GDP 대비 과세수입 비중 5년간 1%p 증가 목표)과 정부지출 감축안 +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보, 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에너지가격 보장 정책, 취약계층 지원, 건강-사회복지 서비스 및 교육 추가예산 지원)
-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인력-인프라-혁신을 우선순위로 한 성장계획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영국



주: 왼쪽 축은 파운드화 가치로 1파운드당 달러이며, 오른쪽 축은 국채금리(30년물)이며 단위는 %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11. 28).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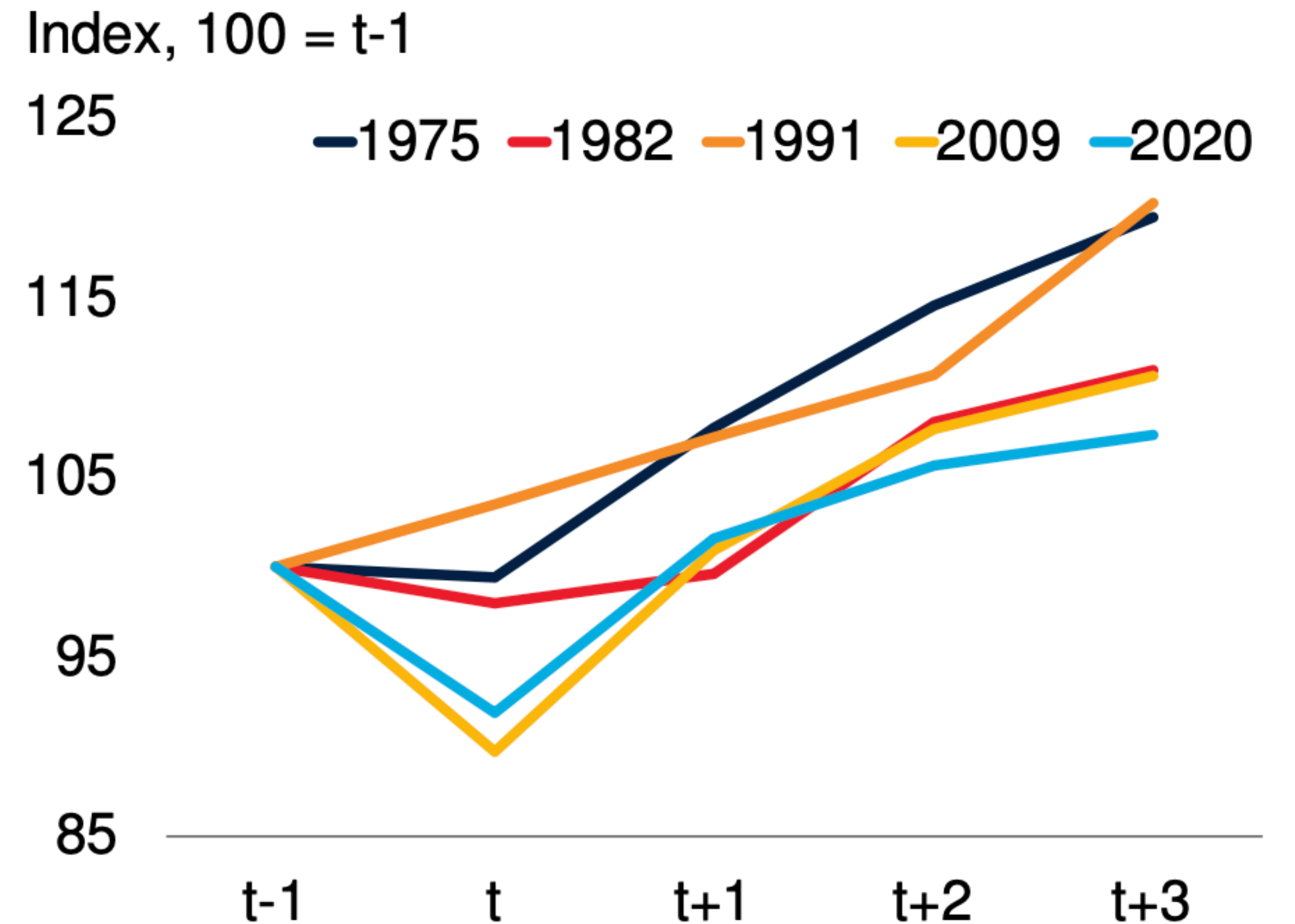
EU와 일본

- EU의 Next Generation Fund: 8,069억유로 경제회복계획 (<https://next-generation-eu.europa.eu/>)
 - 에너지전환과 친환경
 - 디지털전환
 - 보건강화(보건위협으로부터 안전확보)
 - 청년세대의 교육과 창업투자
 - 사회적 연대
- 독일, 프랑스의 주요 에너지 기업 국유화; 유럽 선진국들의 황재세 도입 확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GDP의 1.2% 재정지출(2022년) -> 2023년 2% 상향 계획 (EC 2022)
- 일본: 39조 엔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 재정정책 (에너지 요금 보조, 임금인상 지원 등)
- 주요 선진국의 적자 재정수지 전망은 이런 지출확대 정책을 반영; 한국의 재정수지 추이와 전망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흑자

2023년 이후 전망

복합적 불확실성과 더딘 회복

- 주요 선진국들의 동시 긴축 통화정책 -> 글로벌 경기불황
- 과도한 동시 긴축의 가능성 (World Bank, OECD, IMF)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무역 성장률 회복이 다른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가장 더디게 이루어질 전망
- 글로벌 경제의 정치경제적 혼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무역질서의 파편화 가능성
- 지체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재난 증가로 인한 혼란 가중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무역성장률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Haver Analytics; Kose, Sugawara, and Terrones (2020); World Bank.

2023년 이후 전망

- 미국: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 물가 상승률 하락세 전환 그러나 고금리 지속, 낮은 성장률 (0.5%) (World Bank 2023; OECD 2022.11.)
-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높은 에너지 가격, 고금리 지속될 경우 -> 낮은 성장률 (0.0%) (World Bank 2023) (OECD 2022.11월 전망은 0.5%)
(관광호황, 팬데믹 이후 소비회복 등이 성장률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중국: 성장률 상승 전환 (2.7% -> 4.3%) (World Bank 2023)
- 팬데믹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미국의 견제와 무역질서의 파편화 등의 요인에 따라 높은 불확실성
- 중국 제외한 신흥시장과 개도국 진영: 성장률 하락 (3.8% -> 2.7%) (World Bank 2023)
- 환율 급등, 자본 유출, 금융위기의 위험 지속

팬데믹과 대전환기, 경제정책의 새흐름

-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성장
- 기후재난/보건 위험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
-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부의 리더십
- 정의로운 전환
-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재정정책의 중요성
-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수정?

팬데믹과 대전환기, 경제정책의 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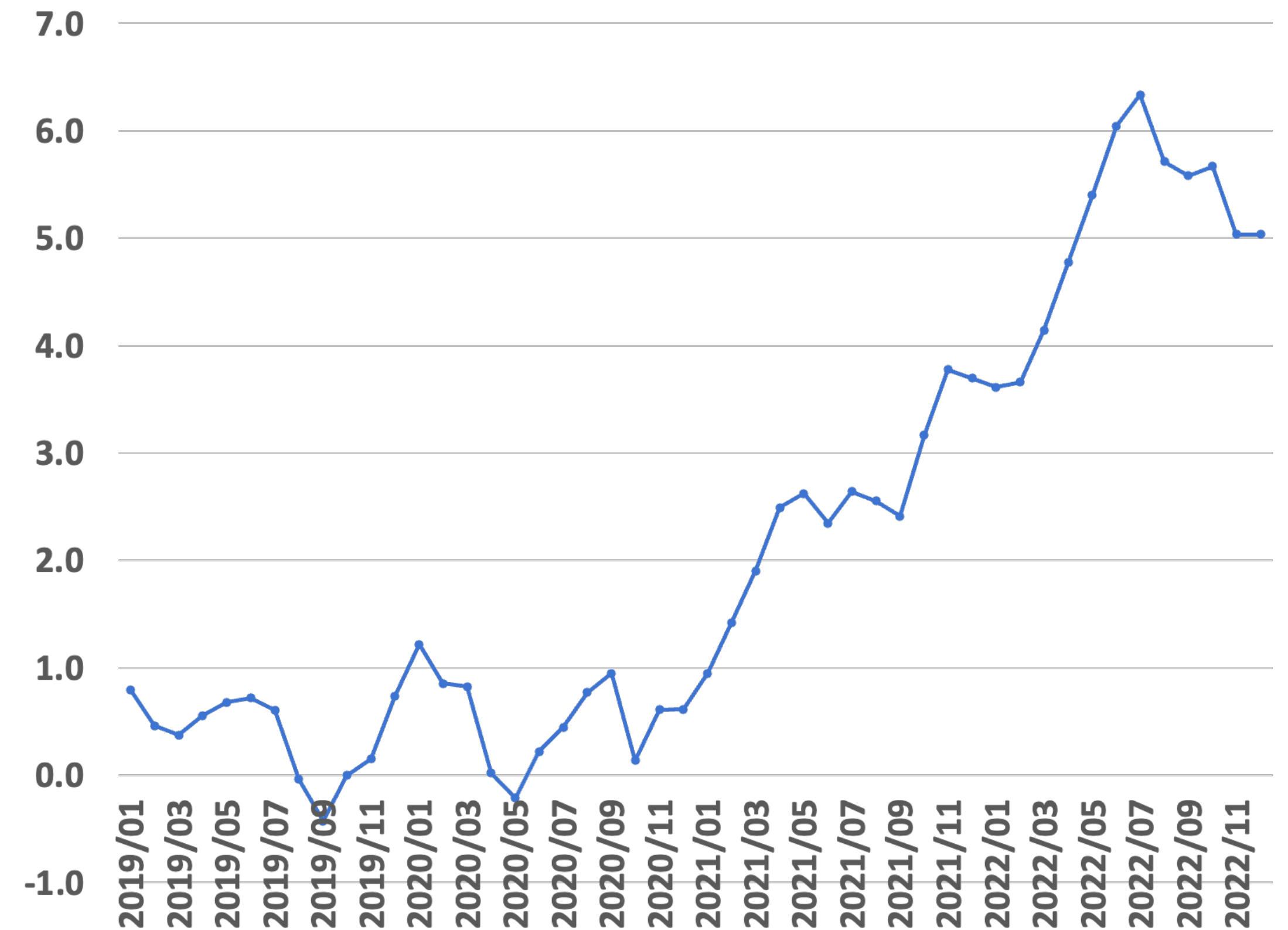
-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수정? -> 새로운 무역질서의 재편
 - 약탈적 재편이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편이나?
 - 초강대국 미국의 단일 패권에 의한 약탈적 재편의 가능성;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실현가능한가?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걸림돌 (선진국 진영 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도국 진영의 갈등) -> 기후위기 대처 실패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 대한민국의 길은? 대한민국의 선택은?
 - 국익과 주권이란 기틀 위에서 평화,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구체화 될 수 있어야
 - 동맹국, 우방국 등이 자국 이익에 맞게 재단한 보편적 가치의 슬로건과 동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실화하고 구체화.

한국경제 진단

물가

- 인플레이션은 2022년 7월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5%)
-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크게 증가
- 고물가로 가계 생활비 크게 증가
- 2023년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락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
- EU와 북미 보다는 물가상승률 낮음
 - 원유, 가스 등 연료와 식품 원자재 가격 인상과 같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큼 (OECD Economic Outlook 2022(issue 2), p.19,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수요 측 요인 큼), 향후 공급 측 요인은 해소 예상

물가상승률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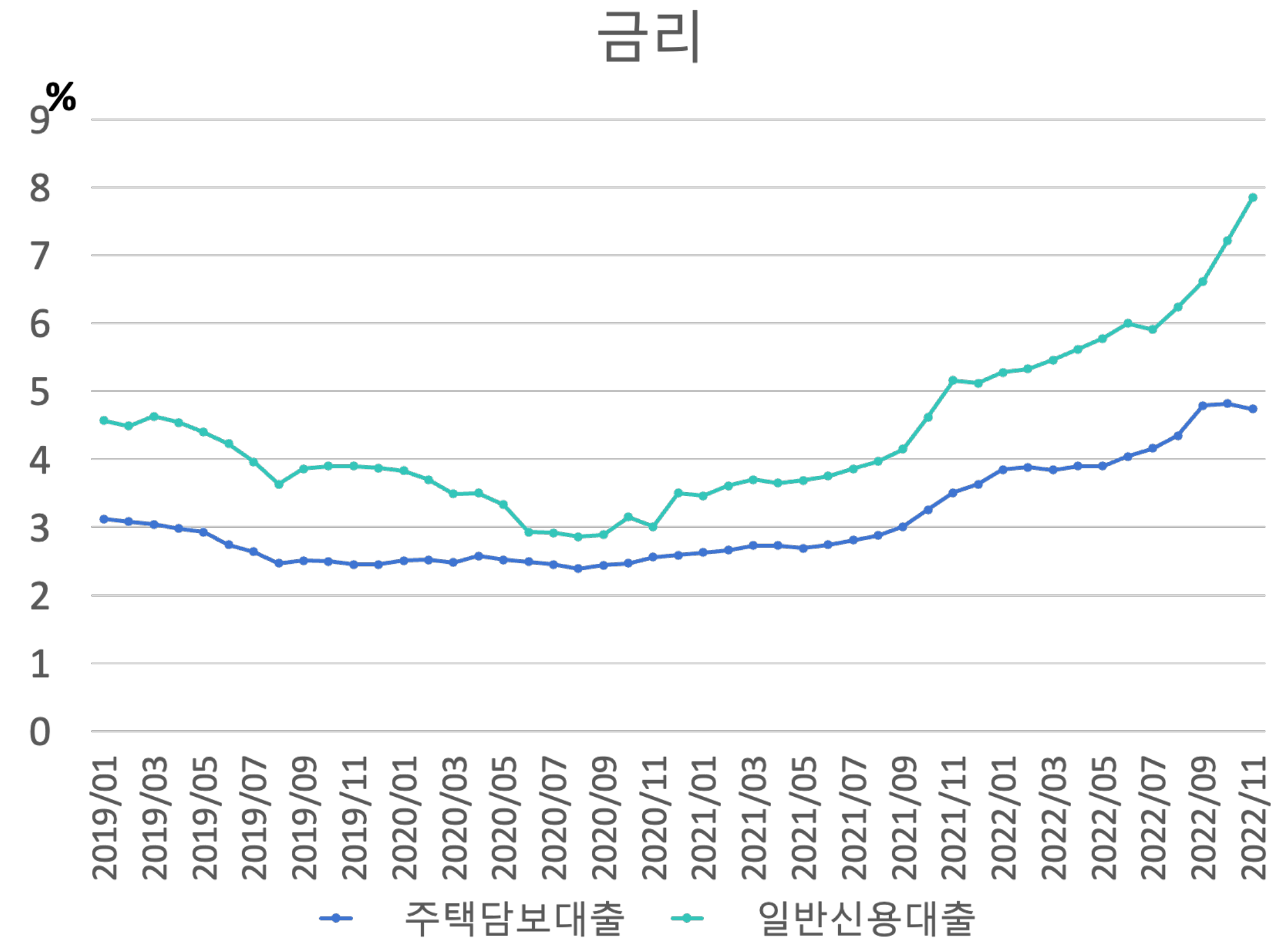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경제 진단

금리

- 금리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중 (21년에 비해 금리가 2배이상 증가):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
- 고물가-고금리는 현재 미국 등 다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 (원인도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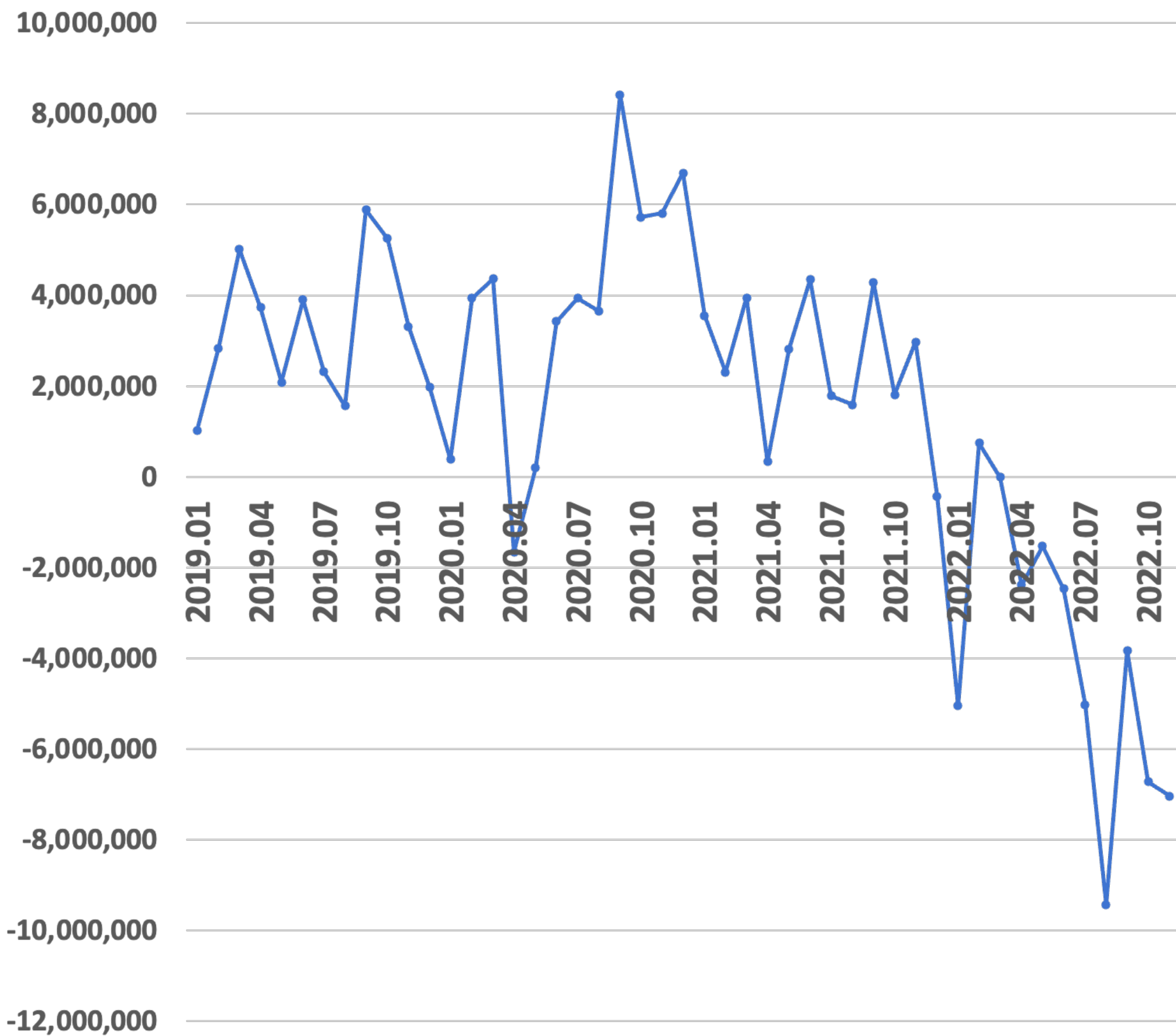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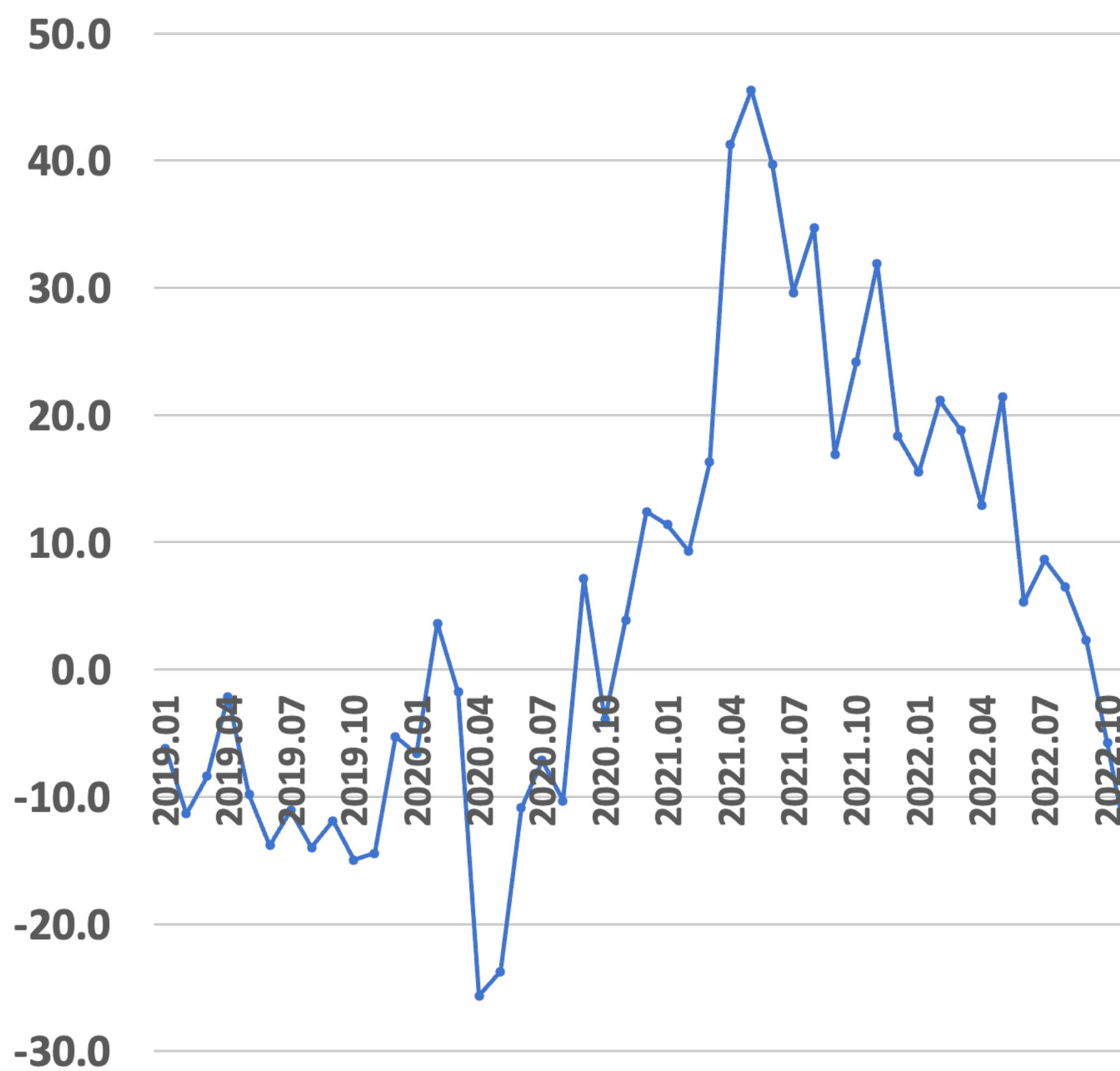
한국경제 진단

무역동향

우리나라 무역수지 (단위 천불)



수출성장률 (% ,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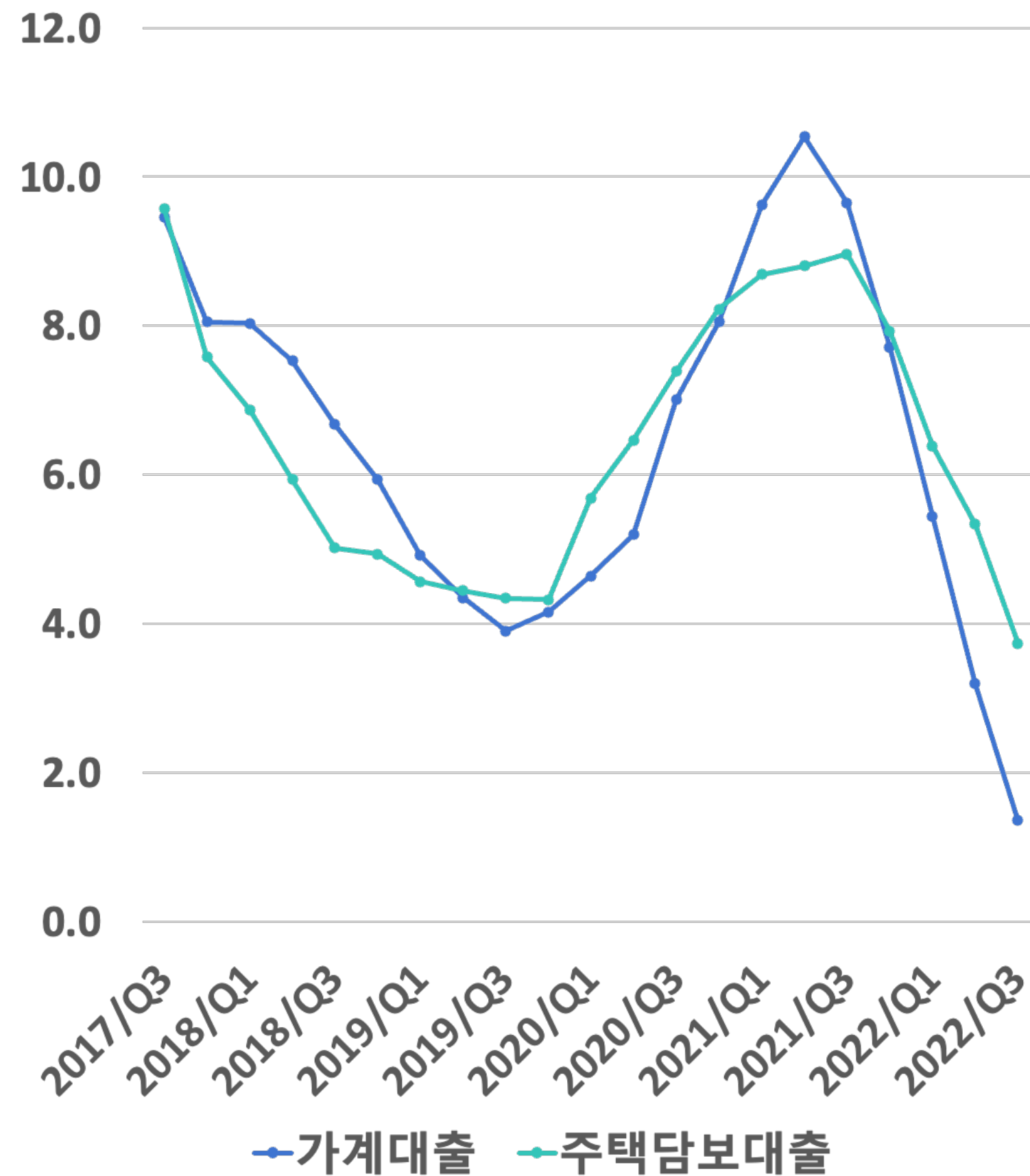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주요인: 반도체 수출의 감소. 중국경제의 급격한 위축 -> 대중수출 감소와 무역수지악화
- 올해 세계 경제 침체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과 경기회복도 변수.
- 구조적인 변화: 향후 주력 수출 상품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차전지, 배터리, 엔터 및 미디어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 특히 엔터 및 미디어 수출액이 2차전지와 배터리 보다 훨씬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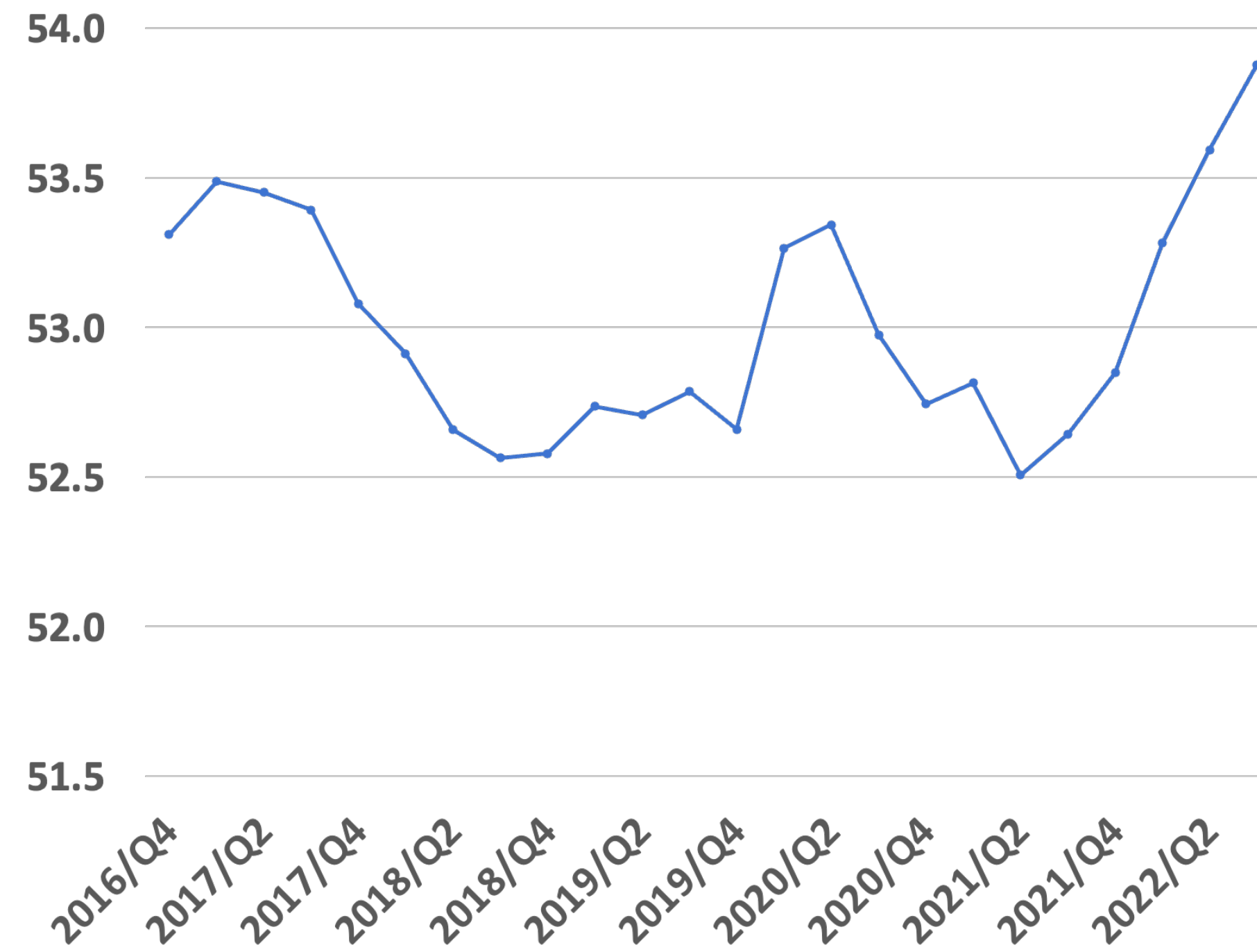
한국경제 진단

가계대출

가계대출 증가율 (% , 전년 동분기 대비)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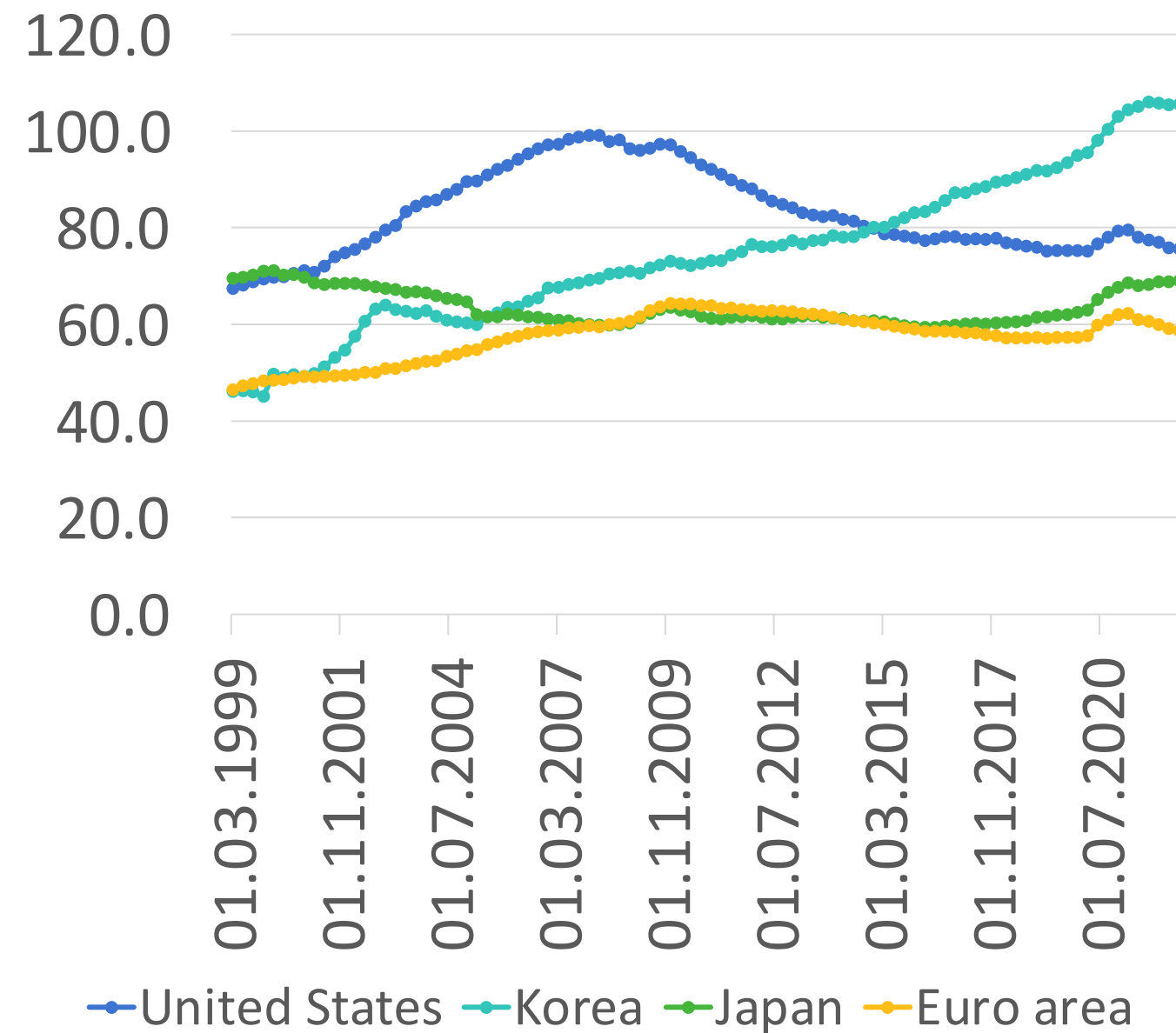
- 가계대출 증가율은 21년 2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1년 3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로 가계의 신용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

한국경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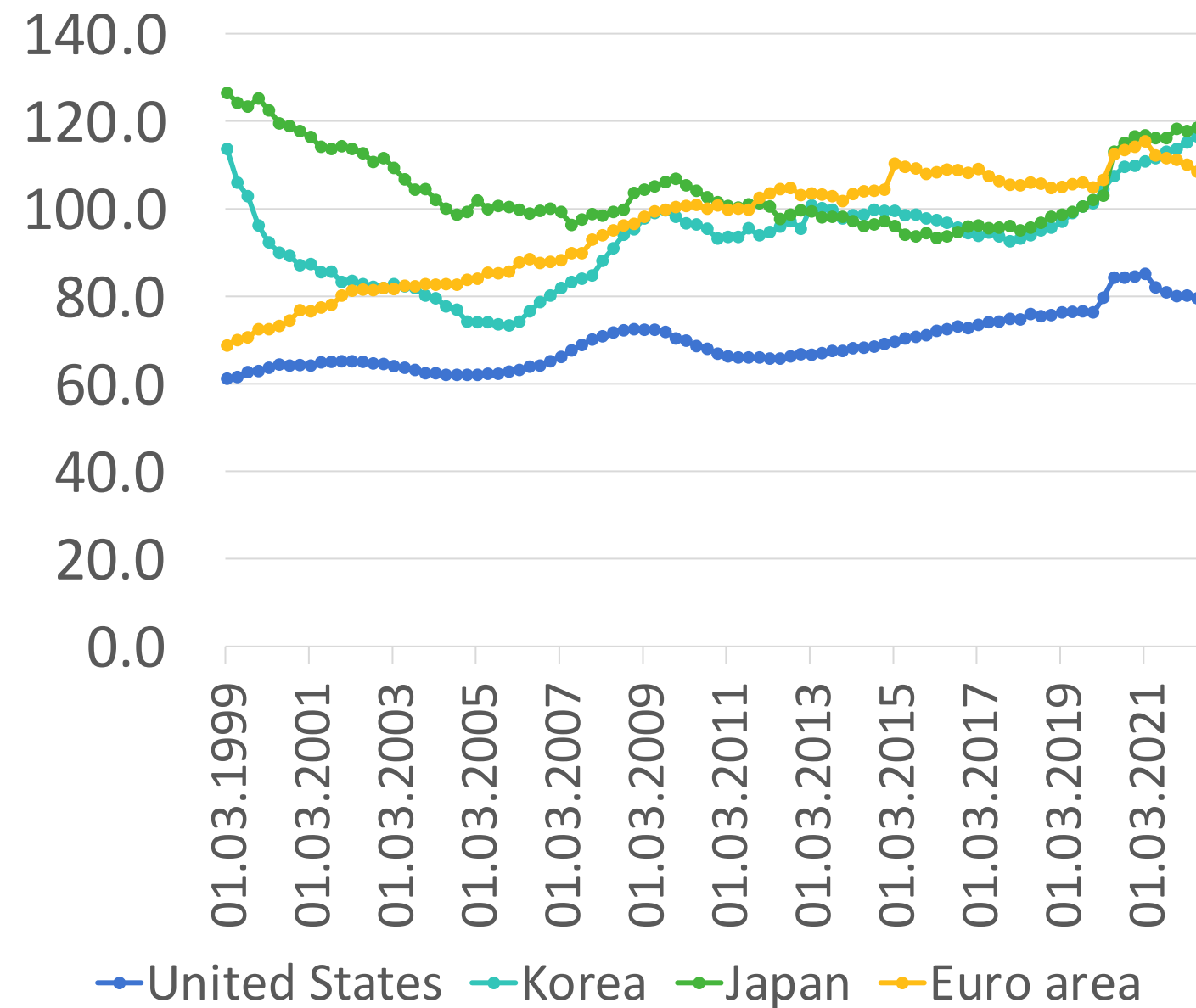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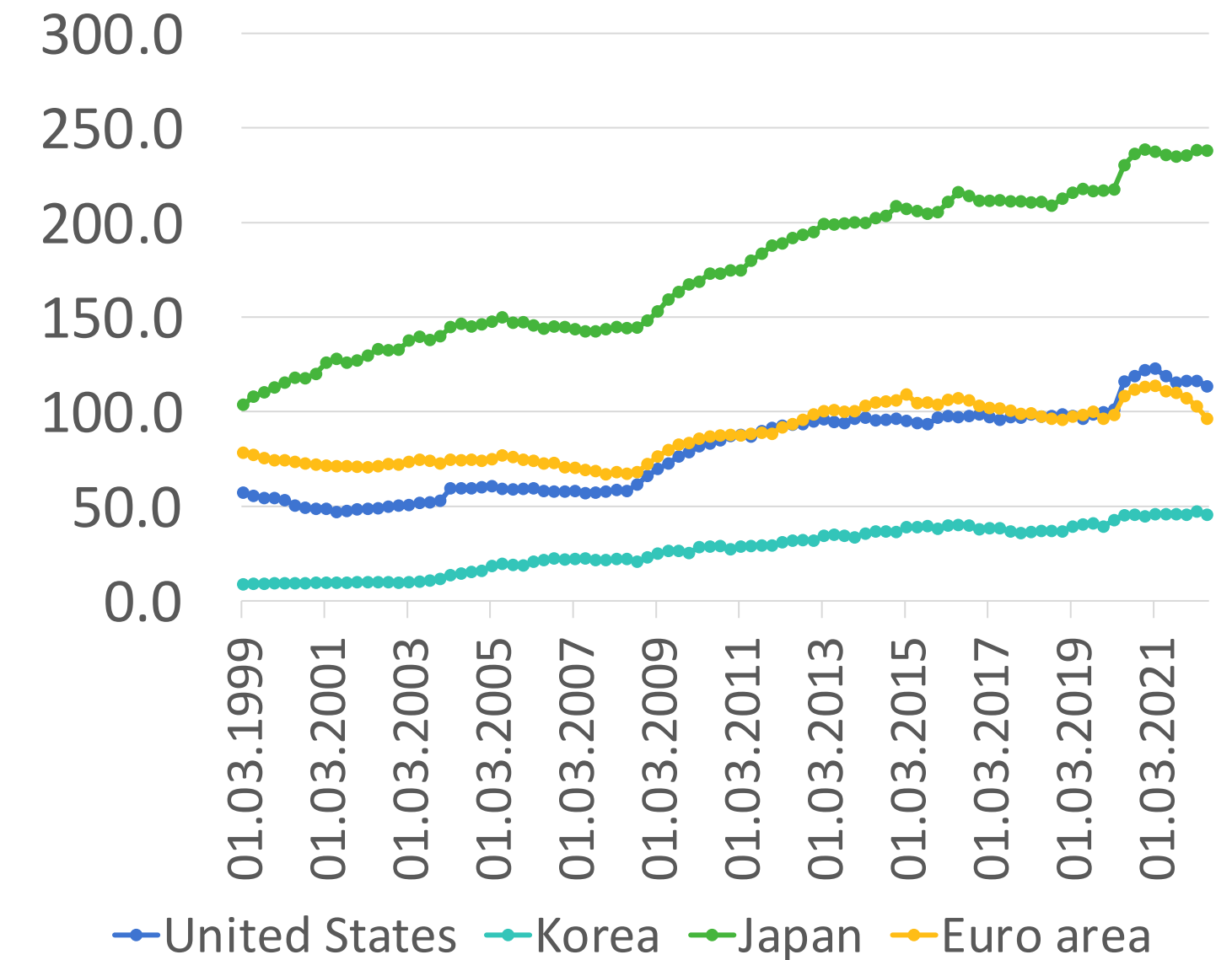
GDP 대비 가계부채



GDP 대비 기업부채



GDP 대비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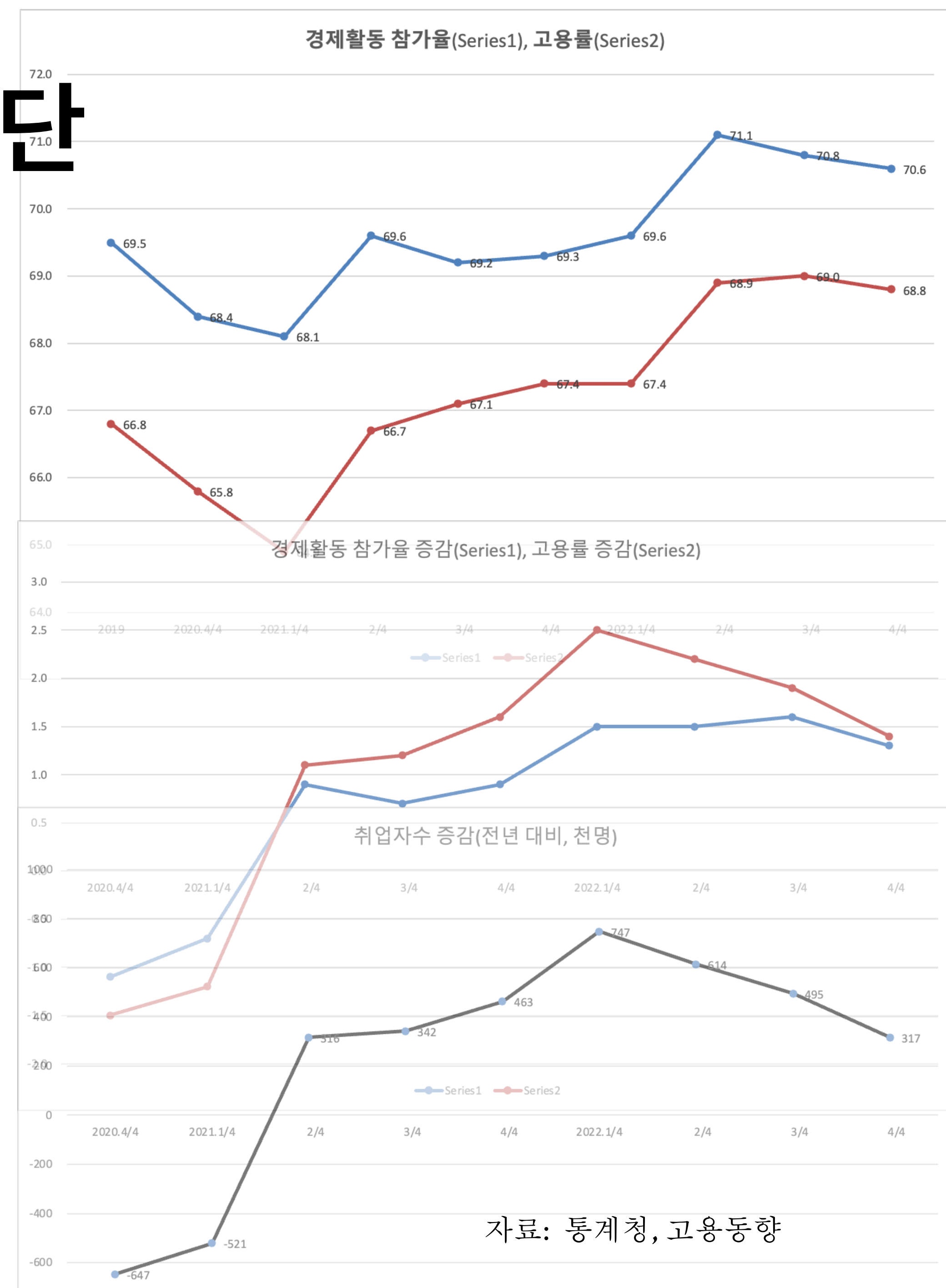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세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훨씬 높은 비중임
- 일본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한국경제 진단

노동

- 2022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큰폭 상승 (역대 최고치 경신)
- 취업자수 증가도 15세 이상 81.6만명으로 역대 3번째로 높았음
- 2022년 중반이후 고용지표 개선 정도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비해 고용성과는 이례적으로 높았음.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한 취업자수 증가.
 - 2023년은 취업자수 장기추세 수준으로 조정되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크게 하락(기저효과+경기둔화, 인구), 고용률은 2022년 수준을 유지, 실업률 소폭 상승 (2022년 연간 고용동향 분석 자료)
- 2022년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하락 (OECD Econ Outlook 2022)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한국경제 진단

- 모든 나라의 위기는 국가 간 경쟁과 추격의 기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이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일본과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는 기회.
 - 중국경제의 성장(10%대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이끔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대중무역이 한국 경제성장을 뒷받침.
- 2023년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차이점:
 - 중국경제의 저성장
 -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 (중국과 경쟁 산업 부문의 확대)
 -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과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동맹국 중심의 협력 강요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

한국경제 진단

- 한국경제의 장점: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크라이나전쟁의 에너지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안정적인 코로나 팬데믹 극복
 -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채
- 한국경제의 단점:
 -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로 미중간 무역갈등에 취약한 글로벌 협업관계
 - 정전체제와 북핵문제,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 갈등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 뒤쳐진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섬과 같은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
 -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
 - 취약한 사회안전망
 - 높은 가계부채 비중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강조하고 작은 정부 추구,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확대,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소득분배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
-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부자 감세 기조
-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미만 유지
- 친기업-반노동적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간 규제 완화안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로 확대하는 등 주간 최대노동시간 규제완화)
 - 노조와의 전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사례
-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축소, 민간위탁, 민관이양 등 공공부문의 사업 축소와 민간사업 영역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완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평가

- (영국 트러스트총리를 최단기에 실각시킨) 30년 전의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의 부활과 2020년대의 세계사적 변화에 역행;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지상주의 이외에 경제정책의 큰 틀과 비전 결여
 -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 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
-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미만 유지: 경제위기 국면에 정부의 손과 발을 묶는 것. 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기업, 취약한 산업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부자 감세 기조: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 긴축적 통화정책과 상충,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야기
 - 법인세 1%p인하로 매년 약 3.3조원의 세수감소, 상위 5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감소액 약 6,740억원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277호-브리핑, 2022.12.25)
 - 종부세 인하로 매년 약 1.8조원의 세수감소(5년간 9조3천억원 감소; 장혜영의원실 추계 2022.12.28)
 - 건전재정기조와 모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평가

- 발전에 역행하는 구조개혁: 공정경제, 플랫폼경제의 공정화, 노동시장 개혁 등에 역행
- 노동시장의 친기업-반노동적 규제 완화
 - 노동시간 규제 완화안: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선진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반개혁 정책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조탄압 노골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산업안전 등 중대 개혁과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 부재
-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 자본의 이윤창출보다 기후재난, 보건위기 등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객관적 타당성도 없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공공성의 가치를 희생하는 소탐대실
 - 향후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등에서 이미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과소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추락.
-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의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 부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 성장지상주의와 단기주의(short-termism)의 패해: 구조개혁과 중대과제를 공격하는 수단
- 낡은 신자유주의 아젠다와 단기적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장기적 지속발전을 추구하는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정책전환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9)
 - 미국, 일본 등 포용국가 전략 사례
 - 한국적 특수성 반영
- 인적자본과 역량강화에 의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 시장 불평등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복지 확충
 - 소득, 취업, 창업, 교육 등 계층 간, 성별 간, 지역 간 기회평등에 기초한 인적역량 강화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9;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
 - 사회적 역량강화: 각 부문과 조직의 투명성 제고, 제도 선진화, 성숙한 민주주의, 공정시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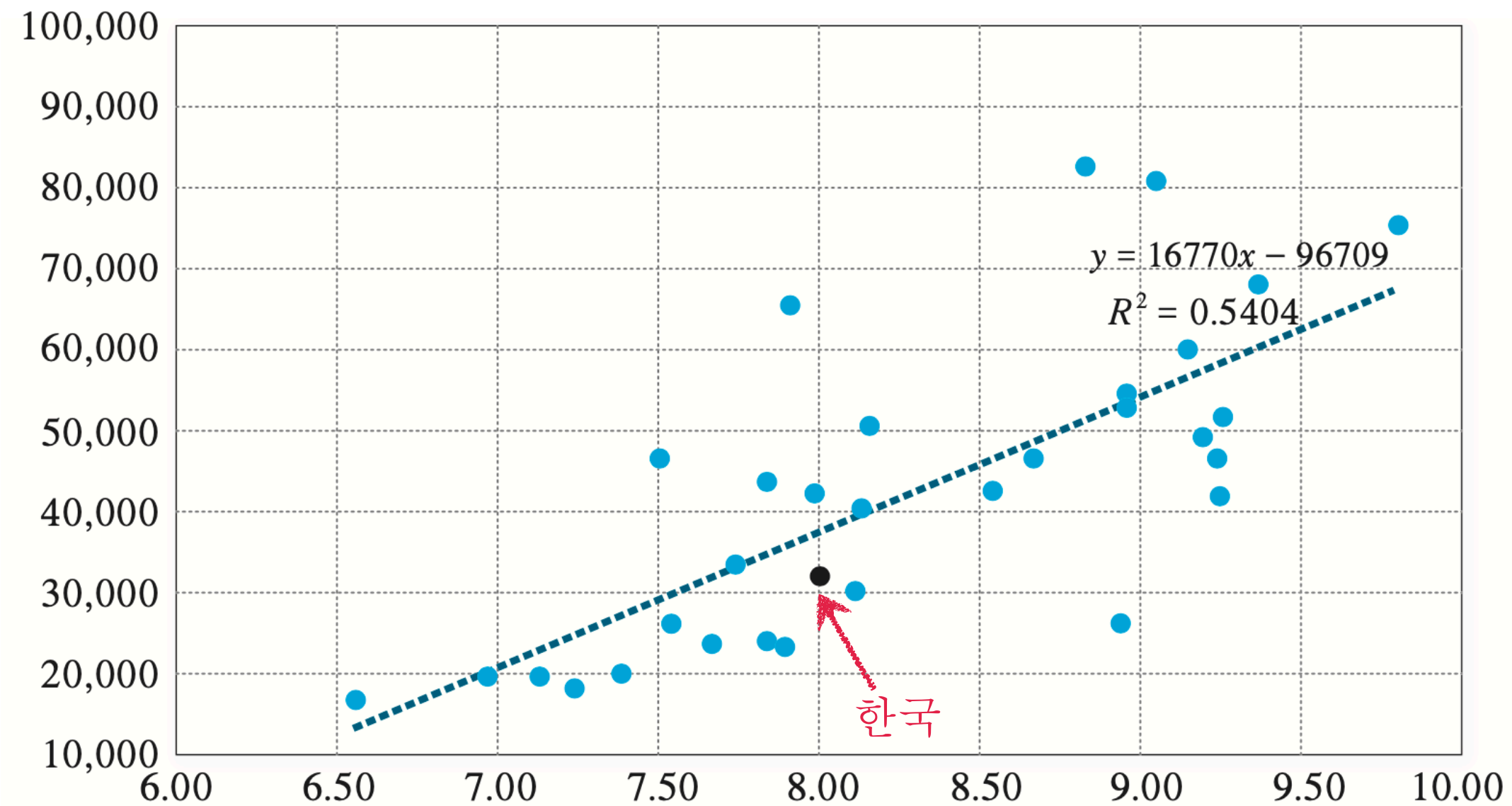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 민주주의의와 경제발전: “민주화”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을 20% 상승시킴. (Daron Acemoglu, et al. 2019: “Democracy does cause growth”, Jof Political Econ, 127)
 - 민주화 -> 교육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 반독점 규제, 창업과 기업성장 등 경제적 기회평등 ->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원동력
-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복지국가로 발전했고 ...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 규제장치 구축....이런 복지[국가] 개혁이 없었다면 자본주의의 존속[지속적 경제발전]은 어려웠을 것’ (Gabriel A. Almond, 1991, “Capitalism and democracy”,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
 -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중진국 추월의 기반은? 1987년 이후 민주화
 - 유럽과 북미 선진국 추월의 기반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 **정부와 시장의 투명성**

정책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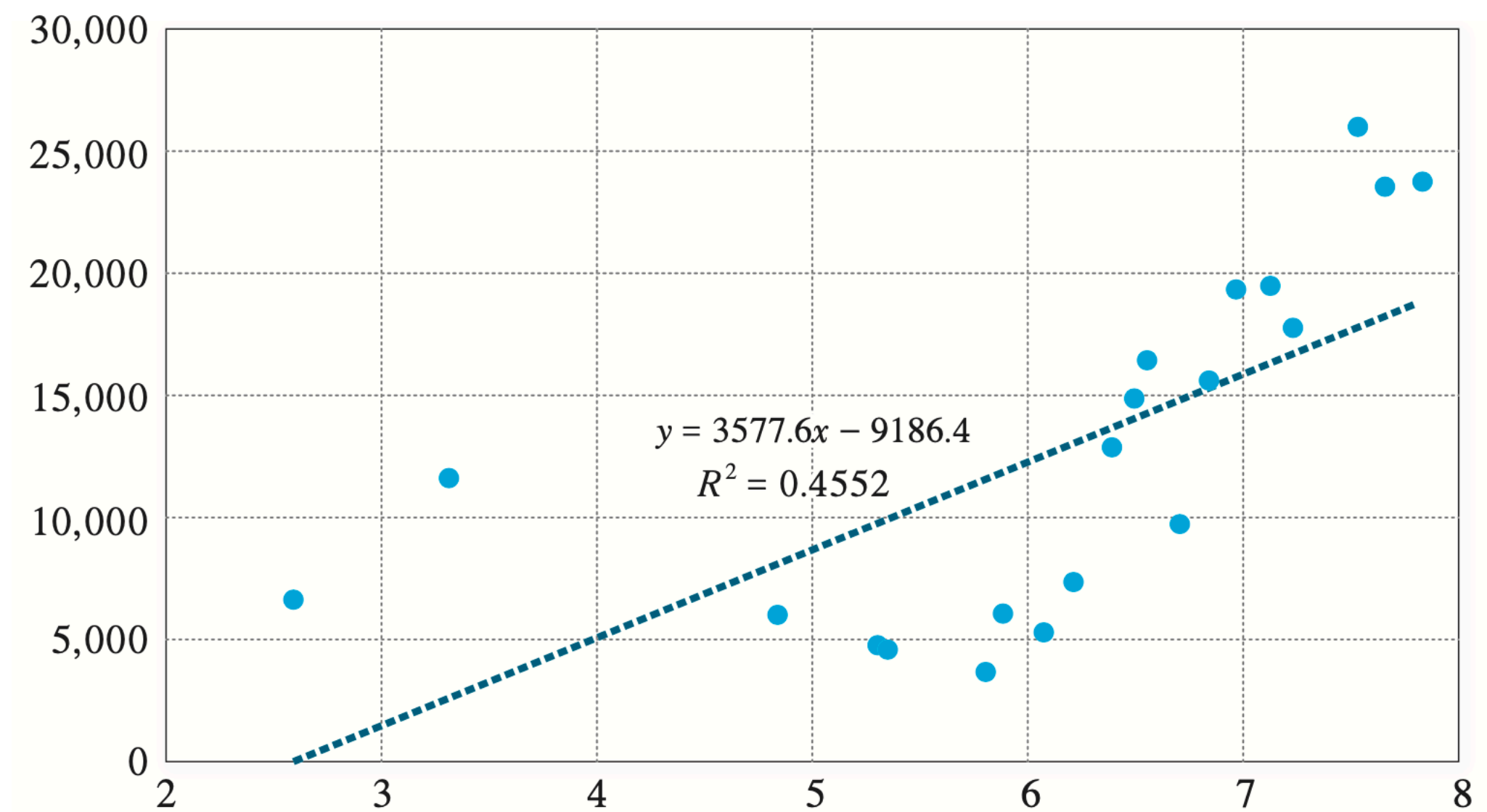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민주주의지수(EIU)와 1인당 GDP의 관계



주 : 중동, 홍콩, 싱가포르 제외한 GDP 상위 30개 주요국 자료. 한국은 검정색 점.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민주주의 지수, 2020년), IMF(1인당 국내총생산, 2019년)



주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자료.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민주주의 지수, 2020년), IMF(1인당 국내총생산,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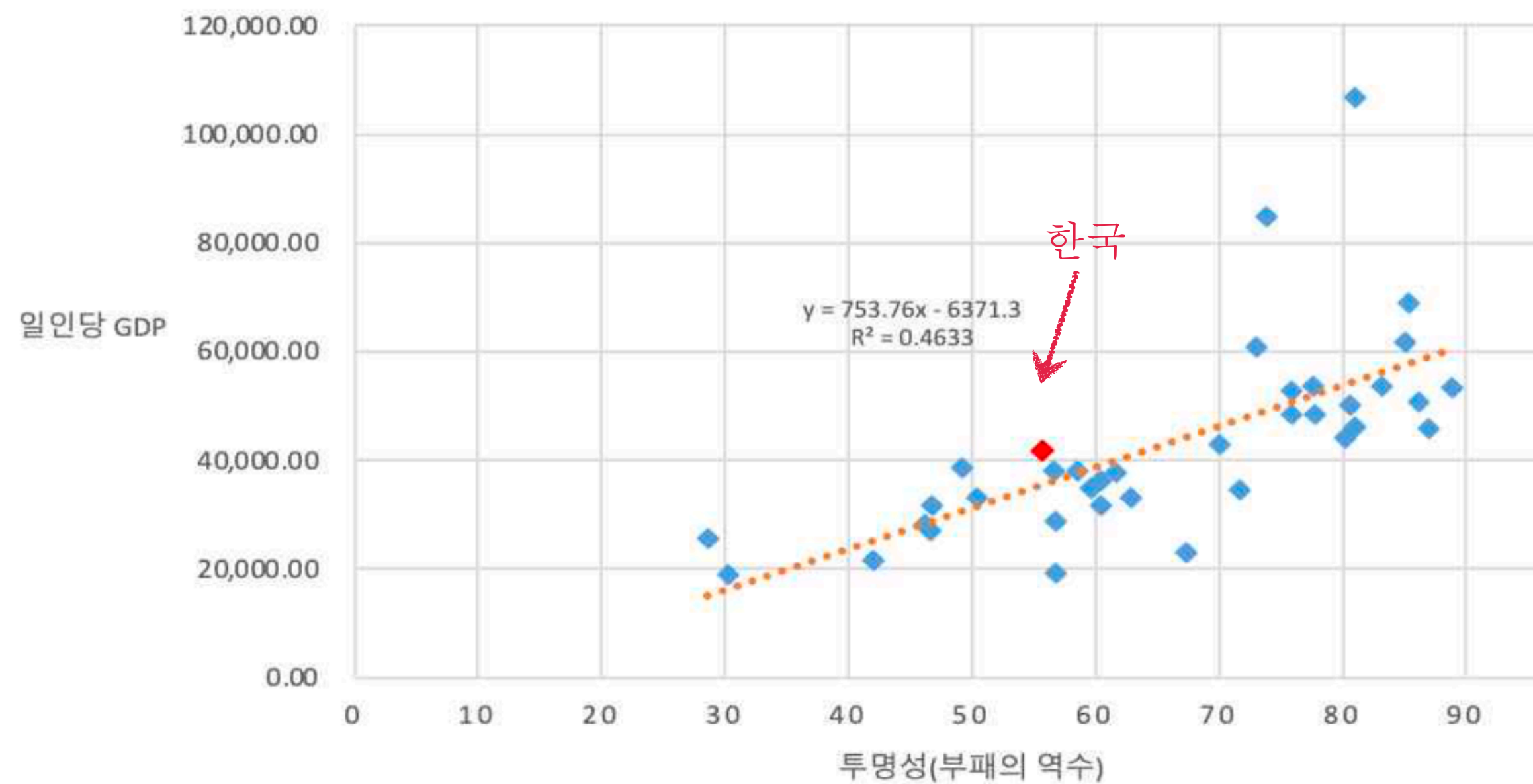
그림 출처: 주병기 외 (2022): <정의로운 전환>, pp.19-20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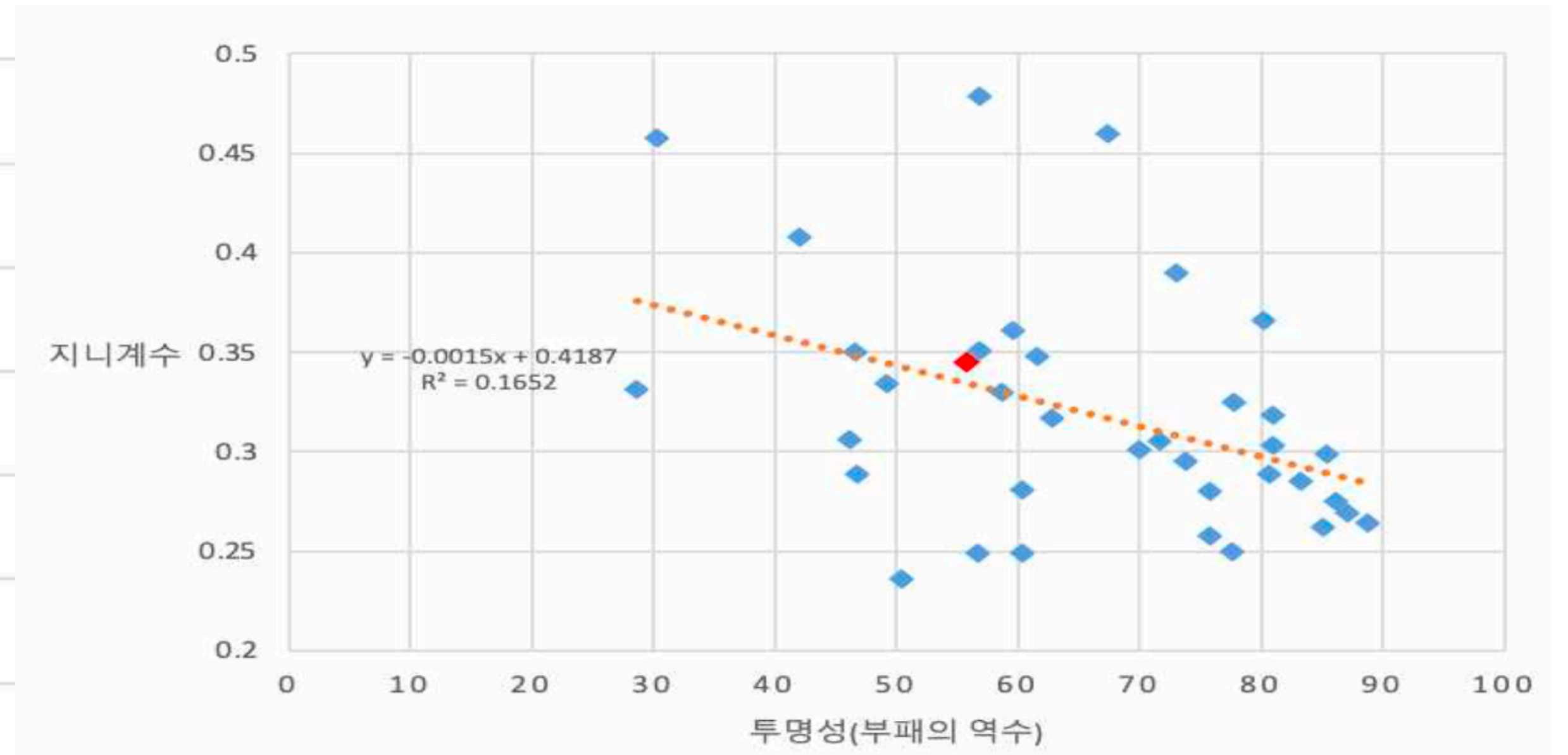
(중대)부패, 경제발전, 불평등

〈그림 4〉 부패와 경제발전
 〈Figure 4〉 Corrup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자료: OECD Statistics. 2015년~2019년 투명성(5년평균)과 2019년 일인당 GDP의 관계

〈그림 5〉 부패와 불평등
 〈Figure 5〉 Corruption and inequ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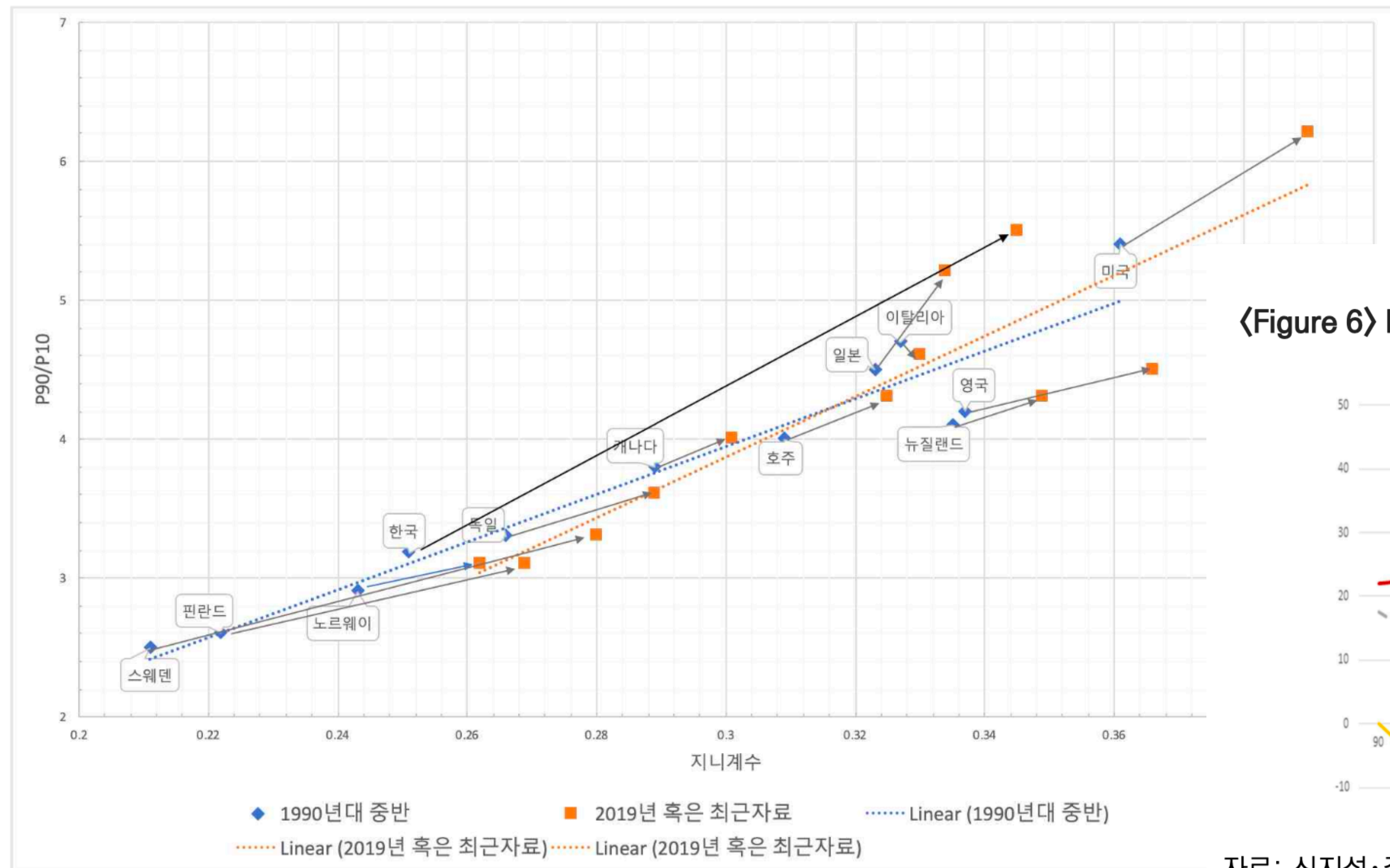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투명성(2015년~2019년 5년 평균)과 지니계수(2016년~2018년 중 최신년)의 관계

그림 출처: 주병기 (2021): “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한국행정학보, 55.

정책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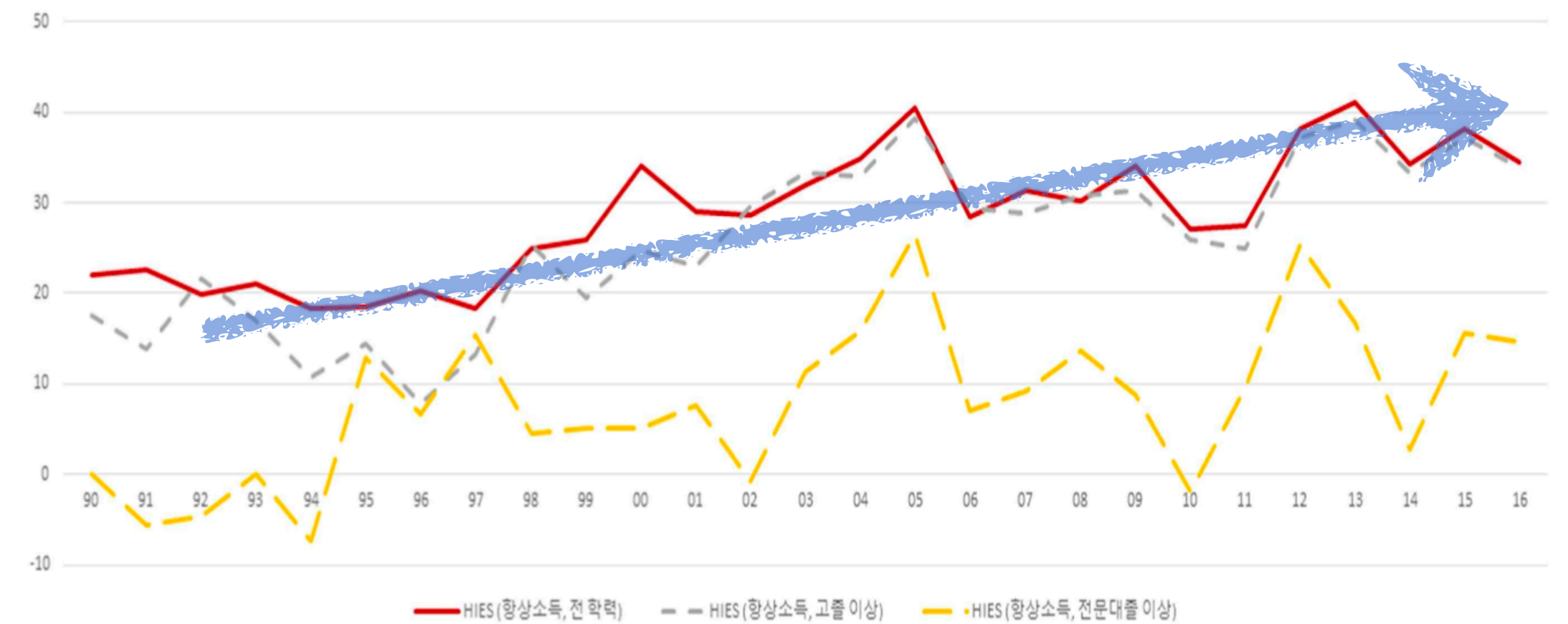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그림 3〉 소득불평등의 변화: 1990년대 중반에서 2019년까지
 〈Figure 3〉 Change of income inequalities between mid-1990s and 2019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계층 세습)

〈그림 6〉 부친의 학력환경 하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 장기추이
 〈Figure 6〉 Long-term trend of inequalities of opportunities for income among socioeconomic classes



자료: OECD Statistics 최신년. 한국은 통계청(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신지섭·주병기 (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32 경제학연구.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팬데믹,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역질서 재편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정부의 위기관리 역할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통화긴축과 고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정책
- 재정정책: 취약계층과 부문에 대한 지원 + 재정지속가능성 강화
 - 긴축적 통화정책과의 조화 (물가상승 압력 추가 없이)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취약 가구와 취약 기업 겨냥한 한시적 지원확대
 - 에너지 소비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디자인
 -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 (재정지원, 공급다변화, 소비감축 등)
 -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조화;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의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강화
 - 부자증세, 횡재세 도입 등을 통한 재정확충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대전환(에너지/디지털 전환, 복지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 기후위기에 대비한 투자 확대: 공공부문을 통한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 에너지전환과 그린 산업에 대한 규제와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투자 활성화
 -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의 유인을 강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확대,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 에너지/플랫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직업/평생 교육, 일자리 전환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플랫폼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력 균형을 위한 규제,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자의 협상력 제고 방안
- 공급망 재편 전략: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정치와 이념 갈등 속에서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 야기하는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
- 국내 정치 갈등이 만드는 경제리스크 최소화
 - 레고랜드 사태, 한전의 적자누적과 재무적 위험 등
- 과도한 이념지향성이 야기하는 군사/외교/안보 정책의 경제리스크 최소화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에서 국익보다는 국내 정치/이념편중 현상
 - 남북관계 사례: 남북 간 대화 혹은 긴장완화 노력 없이 한미일 군사적 공조 체제만 강화하고 있는 현상
황이 군사적 긴장/갈등을 확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이 얻는 것은 이를 명분으로 군사적 무장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중국 군사안보 주도권 확보
 - 미국이 얻는 것은 한미일 공조와 일본 무장을 통해 대중국 군사적 견제강화와 군수산업의 수요확대
 - 한국이 얻는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지적 충돌 가능성, 중국 외교적/경제적 갈등 등 안보문제가 야기하는 경제 리스크만 커짐 -> 경제위기 상황에 안보/지정학적 리스크 가중시키는 꼴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인적자본과 역량 기반 강화

- **인적역량** 강화와 인적자본의 고도화
 - 노동시장 선진화 (건강, 안전, 일-여가 균형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 격차해소, 노동시간 감축)
 - 교육 선진화 (교육격차해소, 평생/직업 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 등)
 - 복지 선진화 (사회복지, 의료/고용/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질적 개선)
- **사회적 역량** 강화
 - 사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 법치주의; 사법개혁)
 - 시장 선진화 (정실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힘의 균형)
 - 성숙한 민주주의 (법 앞의 평등; 언론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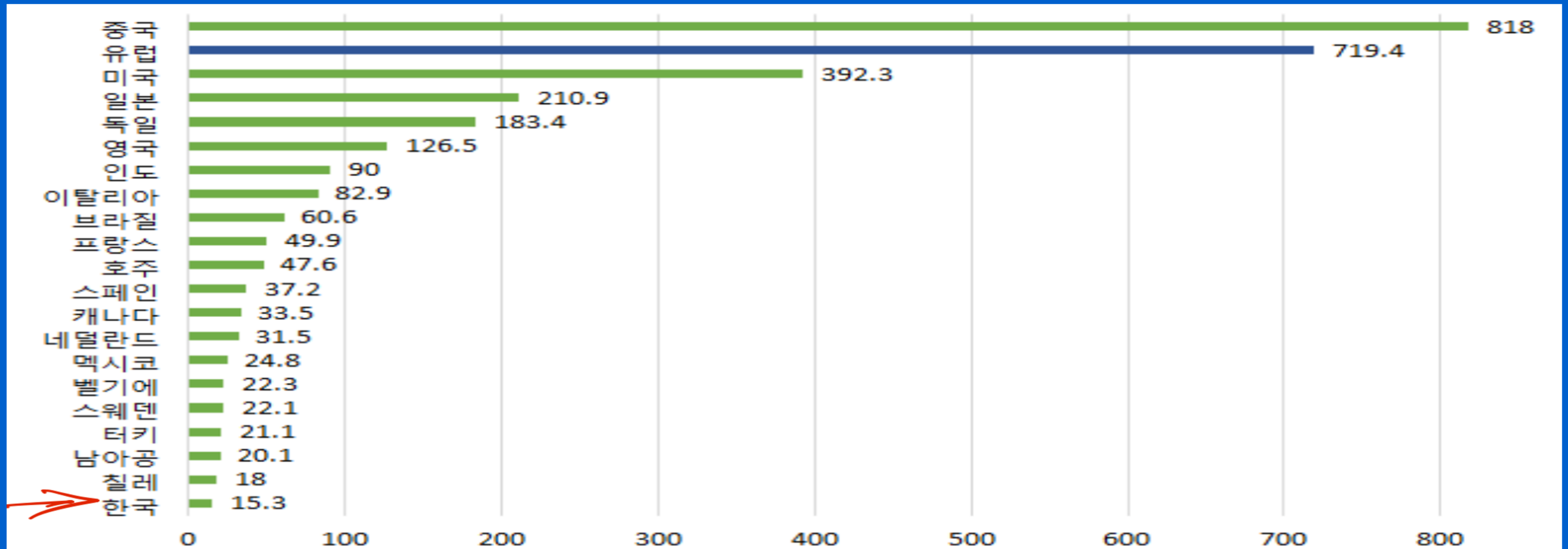
지속발전 전략: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에너지/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선도형 경제 도약

- 에너지 전환
 - 디지털 전환
 - 기술선도형 경제
- 
- 그린소사이어티 전략
 - 디지털선도 전략
 - 역량대국 전략

2010년~2019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국가 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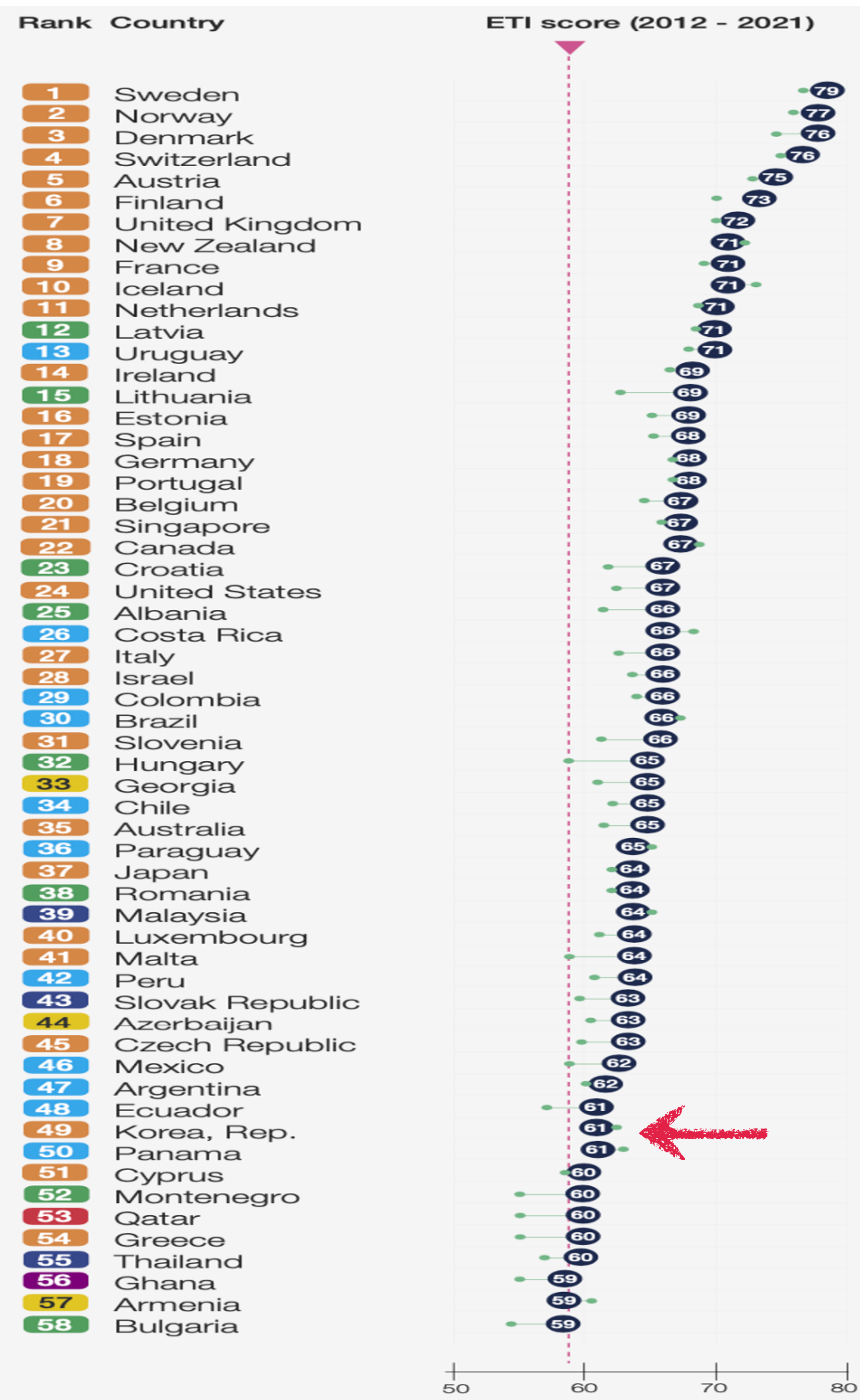
2010년~2019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b) 국가별

자료: Frankfurt School(2020), p.31.

출처: 조일현.이재석,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20



World Economic Forum (2021년 보고서)

에너지전환지수 (ETI)

대한민국: 49위

선진국 최하위

선진국과의 격차도 매우 큼

한국, 2030년까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급격히 감축해야!

국가	NDC	배출정점부터 2030년 NDC까지의 연감축률 (배출정점 연도)
EU	1990년 대비 최소 55%	-1.98% (1990)
독일	1990년 대비 65%	-2.59% (1990)
프랑스	1990년 대비 40%	-2.27% (2005)
영국	1990년 대비 68%	-2.91% (1991)
미국	2005년 대비 50-52%	-2.73% (2005)
캐나다	2005년 대비 40-45%	-2.33% (2007)
호주	2005년 대비 26~28%	-2.75% (2017)
일본	2013년 대비 46%	-3.56% (2013)
중국	탄소집약도 기준	-0.95% (2019)
한국	2018년 대비 40%	-4.17% (2018)

자료: 세계은행, IEA, Our World Data와 각국의 NDC를 이용하여 계산.

The time is now!

